

‘사드 한국 배치’ 왜 문제인가?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글을 시작하며

사드 한국 배치가 점차 현실로 되어 가고 있다. 공동실무단이 가동(2016. 3. 4)되기도 전부터 한국 국방부는 “미국 측 (군사적 효용성) 기준을 가장 중요 시할 것”이라거나 “배치 지역을 먼저 결정한 뒤 해당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겠다.”(2016. 2. 15)는 입장을 밝히는 등 사드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들을 계속해 왔다. 미국도 공동실무단이 첫 회의를 한 직후에 리퍼트 주한 미 대사가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연합뉴스, 2016. 3. 13)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발언을 시작으로 카터 국방장관(2016. 4. 12)이나 로즈 국무부 차관보(2016. 4. 13) 등의 고위 관료들이 사드 한국 (조기) 배치를 확인하는 발언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나 시민사회단체들의 이에 대한 대응은 매우 미온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드 한국 배치의 가능성이 없거나 낮다고 자의적으로 단정하거나 사드 한국 배치가 가져올 부정적 파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가볍게 여기면서 다른 현안에 실천적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일부지만, 사드 한국 배치를 배치 지역에 국한된 사안으로 보거나 심지어는 사드 배치 반대 실천을 주도하는 단체가 다른 사안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운동에 동력을 붙여 위력적인 저지 운동을 전개하려면 앞에서 열거한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판단을 바로 잡

는 것부터 선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글은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피하는 군사전략적 배경과 의도를 살펴봄으로써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가 강고하고 끈질기게 추진되는 사안이며, 동북아의 전략안정과 지역안정을 파괴하고, 동북아와 한반도에 신냉전체제와 핵대결 및 군비경쟁을 초래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통일을 더욱 지연시키게 되리라는 사실을 밝힌다.

이를 위해 사드 한국 배치 논의가 전면화 된 이후 제기된 각 논점들을 주제별로 분류해 발제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입장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방식으로 인식차이를 해소하거나 좁힘으로써 판단과 실천의 통일성을 제고해 보고자 한다.

1.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의 군사전략적 배경

1) 동북아 및 전 세계 MD 체계 구축

현재 미국은 전 지구적 차원의 MD 체계를 구축하면서 유럽에서는 EPAA(Phased Adaptive Approach in Europe, 유럽에서의 단계적 적응적 접근), 중동에서는 MEPAA, 아시아태평양에서는 APPAA를 구축하고 있다. 이 세 지역의 MD를 하나로 연결해 지구적 차원의 MD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빨리 구축에 들어간 것은 EPAA로 2011~2020년 사이에 완성할 예정이며, APPAA는 2012년경부터 구축이 시작되었으며, 한미일 3국의 동북아 MD가 그 중심축을 이룬다. MEPAA도 2012년경부터 아랍 에미레이트를 비롯한 걸프협력기구(GCC)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드 체계, 그 중에서도 사드 레이더(AN/TPY-2 X-밴드 레이더)의 한국 배치는 동북아 MD 구축을 위한 핵심 고리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2,000km를 훨씬 웃돌아 5,000km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의 MD 전문가인 포스톨 교수도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4,000km로 보면서 2,000km라는 주장을 넌센스라고 일축한다. 미국의 <타임>(2012. 5. 30)지도 이스라엘 배치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4,600km로 보도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중국의 모든 탄도미사일을 발사단계부터 조기에 탐지, 추적할 수 있으며, 미국을 겨냥해 날아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과 일본을 겨냥해 날아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 추적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이 이를 요격할 기회를 최소 1번 이상 더 갖게 된다.

더욱이 사드 레이더는 식별 능력이 뛰어나 탄도미사일의 진짜 탄두와 가짜 탄두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진짜 탄두와 가짜 탄두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 MD가 지금까지 극복하지 못한 최대 취약점 중 하나였다. 이에 미 물리학회는 매년 발행하는 MD 보고서 「Making Sense of BMD」, 2013. 11)에서 미국이 운영하는 지상 배치 조기경보 레이더를 X-밴드 레이더로 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렇듯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 중심의 동북아 MD 체계의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준다. 터기 배치 사드 레이더가 이란을 빌미로 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조기 탐지, 추적하기 위한 EPAA 구축의 전제이듯이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도 북한을 빌미로 한 중국 탄도미사일을 조기 탐지, 추적하기 위한 APPAA 구축의 전제다.

이에 미국은 수년 전부터 사드 레이더의 한국 배치를 추진해 왔다. 이명박 정권 때는 백령도에 사드 레이더 배치를 제안하기도 했다.(내일신문, 2013. 10. 8) 이때는 미국이 일본 사리키에 X-밴드 레이더를 배치(2006년)한 데 이어 두 번째 X-밴드 레이더를 배치하기로 결정(2012년)하고, 일본도 규슈(2008년), 사도(2009년), 오미나토(2010년), 오키나와(2011년)에 FPS-5 지상 조기 경보 레이더를 추가 배치하는 등 미일이 동북아 MD, 특히 센서 체계의 완비에 박차를 가하던 때다.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미국의 동북아 MD 체계의 가장 핵심 센서라고 할 수 있다.

2) 동북아 및 전 세계 군사동맹 구축

미국의 지역 MD 구축은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동 지역의 군사동맹 구축으로 나아간다. 특히 아태 지역에서의 다자 군사동맹의 구축은 전후 미국의 해묵은 숙원이었다. 그 중에서도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은 미일 중심의 아태 지역 군사동맹 구축의 핵심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 전

략'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 위안부 문제의 한일 야합을 강제하거나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으로 일본의 침략전쟁의 책임을 사해준 것도, 한국인 원폭 희생자의 존재를 인정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도 모두 미일동맹의 강화와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한일 내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군사적인 측면에서 견인해 낼 매개 고리가 바로 한미일 MD다. 한미일 3국은 이미 실시해 오고 있는 '태평양 드래곤'과 같은 연합 MD 훈련을 고도화하고 한미일 전력이 주축이 된 PSI(확산방지구상)와 같은 대북 해상차단훈련 등을 전면화하여 한일군사관계를 작전, 군수분야 전반으로 확장함으로써 (준)군사동맹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를 위해서 미일은 한일군사 정보보호협정(GSOMIA)와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미국 의회 보고서(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Ballistic Missile Defence in the Asia-Pacific Region, 2015. 4. 3)도 “통합 BMD 체계가 보다 제도화된 지역 집단방위(동맹)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은 미일호 (준)군사동맹 등과 결합되어 한미일호를 주축으로 하는 아태 지역 다자 군사동맹체를 구축하게 된다.

한편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은 한일호 3국의 나토 개별 파트너십 가입-한국 2012년, 호주 2013년, 일본 2014년-으로 이미 아태 지역에 진출해 있는 나토와도 결합하게 된다. 미영 중심의 나토와 미일 중심의 동북아 및 아태 지역 군사동맹을 결합시킴으로써 전 세계적 군사동맹이 구축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 주도의 지구적 차원의 MD 및 군사동맹 구축은 러시아와 중국을 포위함으로써 전 세계적 차원의 신냉전체제를 불러오게 된다. 그 결과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전략과 전력에서 냉전시대를 능가하는 미일한호 대 북중러 간 군사적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 사드 배치는 동북아 MD와 군사동맹 구축 및 세계 MD와 군사동맹 구축으로 아태 및 세계 패권을 강화하려는 미일의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사드 한국 배치는 단순히 무기체계 하나를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한 국가나 정권 차원에서, 혹은 총선 등의 승리를 위한 정략적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안도 결코 아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미일의 패권전략의 요구 속에서 강고하고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사안이라고 하겠다.

2. 미일이 사드 한국 배치, 동북아 MD와 군사동맹 구축으로 노리는 것

1) 미국 절대 우위의 전략안정 구축

현 미중 간 전략 구도는 미국 우위의 전략안정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미일 주도의 동북아 MD가 구축되면, 곧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현 미중 간 전략안정은 미국 절대 우위의 전략지형으로 전변될 수 있다. 이러한 동북아 전략지형의 전변을 강제할 수 있는 미일의 지렛대가 다름 아닌 동북아 MD 체계다.

바로 한국 배치 사드는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ICBM을 무력화시키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 배치 사드는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ICBM을 부스트 단계에서 상승단계에 이르기까지 조기 탐지, 추적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이 이지스 BMD나 미 본토 배치 GBI로 중국의 ICBM을 2~3번 요격(‘Shoot-Look-Shoot’) 할 수 있는 조기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중국의 ICBM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중국은 핵 강대국 중에서 유일하게 핵선제사용(First Use) 정책을 포기한 국가다. 반면에 미국은 핵 강대국 중에서 유일하게 핵선제사용 정책을 포기한 적이 없는 국가다. 따라서 미국 MD에 의해 중국의 ICBM이 일부라도 무력화된다면 중국의 대미 억지력, 곧 미중 간 전략안정은 근거에서부터 무너지고 만다.

이에 미국 과학자 연맹도 2011년 9월에 발표한 보고서(「Upsetting the Reset」)에서 미국 MD가 미중 간 전략안정을 흔들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ICBM이 50여 기에 지나지 않아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GBI(지상배치 ICBM 요격미사일, 2017년까지 44기 배치 예정)를 비롯해 SM-3 BlockⅡA(2017년 배치 예정), ⅡB(개발 중) 등

500여기의 ICBM 요격미사일만 갖춰도, 10%의 요격 효과가 있다고 가정할 때, 중국의 ICBM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한 MD 전문가(Wu Riqiang, 인민대)도 미국이 현 MD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면 중국이 ICBM 전력을 강화하지 않는 한 중국의 대미 보복 능력이 무력화되어 현재의 미중 간 전략안정이 1980년대 이전의 미국 절대 우위의 전략구도로 재차 기울게 된다는 분석(「Why China Should Be Concerned with U.S. Missile Defence?」, 2013)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미국이 MD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사드 한국 배치와 동북아 MD 체계 구축 등—하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중국도 핵무기 현대화 작업을 중단하여 핵 전력을 현재의 수준에서 동결함으로써 현 미국 우위의 전략안정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듯 사드 한국 배치와 동북아 MD 구축은 미국의 MD 능력의 획기적인 강화를 가져와 중국의 ICBM 현대화와 전력 강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현 미중 간 전략안정을 미국 절대 우위의 지형으로 뒤바꾸어 놓을 수 있다.

2) 미일 절대 우위의 지역구도 추구

사드 한국 배치는 미중 간 지역안정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

한국전쟁 이래로 미국은 동아태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을 봉쇄하며 패권을 누리려 왔다. 지금도 미일의 해공군력은 중국에 압도적인 우위를 누리고 있다. 특히 한반도 남단에서 시작해 중동에 이르는 해상수송로는 미국의 해상 패권을 상징하며, 미국은 이 지역에 미군 전진배치와 항공모함 등의 전력 투사로 해상 패권을 지켜 왔다.

그러나 이제 중국의 해군력 강화와 해상 진출, 북한의 핵 보유로 동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이 위협받고 있다. 중국은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의 전력 강화로 일본(규슈)—오키나와—필리핀—브루나이(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이른바 제1 도련선과 일본(오가사와라)—괌—파푸아 뉴기니로 이어지는 제2 도련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육상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해 미항로를 축으로 하는 미일 해군력의 접근과 작전을 제약할 수 있다면 미일 해

군력에 비해 크게 열등한 중국 해군으로서는 전력 증강 이상의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다는 중국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DF-21D와 DF-26D는 제1, 2 도련선 내에서 미일 해군력을 견제하는 데서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바로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가 오키나와나 괌 등의 미군기지를 겨냥해 발사되는 중국의 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제1, 2 도련선 내의 항공모함 등을 비롯한 미일 해상 전력을 공격하는 DF-21D와 DF-26D 등의 탄도미사일을 조기 탐지, 추적해 미군 요격체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들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다면 중국 전략군과 해군은 큰 견제를 받을 수 있다. 곧 미국은 제1, 2 도련선 내에서 지금까지 누려온 해상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미중 간 지역적 안정도 미국(미일) 우위로 경도, 고착될 수 있다.

이렇듯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와 동북아 MD 구축은 미일 해상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잠재우고 미일 우위의 해상 패권을 유지, 강화해 나갈 수 있게 해준다.

3)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 능력 뒷받침

아베 정권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첫 번째 사례로 미국을 겨냥한 북중 탄도미사일 요격과 북중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함정과 한국 함정 등을 방호하는 사례를 들고 있다. 일본의 미국 함정 등에 대한 방호는 ‘미일 가이드라인 2015’와 ‘개정 자위대법’에 의거해 평시부터 이루어진다. 이 경우 북중 탄도미사일의 조기 탐지와 추적이 일본 집단자위권의 성공적 행사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미국을 겨냥해 날아가는 북중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탐지, 추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동중국해 등에서 작전하는 미일 함정을 겨냥한 북중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 추적해 미일에 제공함으로써 미군 함정 등을 방호하는 데서, 곧 일본 자위대가 미군 함정이나 한국 함정과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데서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다.

한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첫 번째 대상 지역은 바로 한반도다. 만성

적인 전쟁 위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충돌이나 국지전과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

일본은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개정 안보법에 의거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평시 우발 충돌을 비롯한 무력 충돌을 이른바 일본의 ‘존립위기사태’로 간주해 집단자위권 행사에 나설 수 있다. 평시 미군 함정과 한국 함정 방호나 이른바 일본의 ‘중요영향사태’ 시 미군 지원에 나선 자위대가 북한군과 무력충돌을 벌였을 때도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듯 일본 자위대는 평시, 중요영향사태 시, 존립위기사태 시에 걸쳐 언제라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북한이 대일 무력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대북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다. 소위 ‘적기지 공격론’이다. 이 ‘적기지 공격론’은 일본의 안보법 제·개정 과정에서 나카다니 겐 방위상 등이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주창했는데, 이후 미일은 미일 공동의 대북 선제공격 작전계획(5055) 수립과 관련 전력 도입에 나서고 있다.

일본이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데서 전제로 되는 것은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이다. 자위대가 대북 선제공격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을 파괴한다고 해도 살아남은 북한의 노동미사일이 일본을 공격할 경우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하기 때문이다. 이 때 일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을 겨냥해 날아오는 북한의 노동미사일에 대한 조기 탐지, 추적 능력이다. 바로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이 노동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강화시켜 줄 수 있다.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일본 본토를 겨냥한 노동미사일을 측면에서 탐지, 추적함으로써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 레이더에 비해 탐지 시점이나 해상도에서 훨씬 유리한 정보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 배치 사드는 평시, 유사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해 줌으로써 북한의 대일 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3. 사드 한국 배치, 동북아 MD와 군사동맹 구축이 동북아와 한반도에 미칠 부정적 파장은?

1) 동북아에 신냉전체제가 들어설 가능성 높아

사드 한국 배치로 한미일 3각 MD와 군사동맹이 구축되면 한국은 미일에 전면적으로 견인되는 반면 중국과는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이게 된다. 즉 사드 한국 배치는 한국에게 미중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미 의회 보고서(CRS, 「Ballistic Missile Defence in the Asia-Pacific Region, 2015. 4. 3)도 사드 한국 배치 문제를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에 설 것인지를 묻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선택을 미국 쪽으로 확고히 견인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바로 한미일 군사동맹의 구축이다. 위의 미 의회 보고서도 “통합 BMD 체계가 보다 제도화된 지역 집단방위(동맹)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듯 사드 한국 배치로 동북아 MD와 군사동맹이 구축되면 한미일을 한편으로 하고 북중러를 다른 편으로 하는 동북아 군사적 대결 구도, 신냉전체제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미일은 강고한 군사동맹 관계지만 북중러는 군사동맹 관계가 아니다. 중러관계는 군사적으로 협력 관계이나 동맹관계는 아니며, 북러관계는 최근 밀월관계에도 불구하고 군사협력 관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북중관계는 동맹관계이나 이는 형식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제재 대상이자 대결적 관계에 있다. 따라서 강고한 한미일 군사동맹이 느슨하거나 부분적으로 대결 상태에 있는 북중러 관계를 압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신냉전체제는 과거 냉전체제와는 달리 제로섬의 극한 대결을 벌이는 관계는 아니며, 사안별로 양 진영에 속한 국가끼리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이완된 대결 구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북미, 북일 간 대결 구도는 전략과 전력에서 과거 냉전체제를 능가한다.

2) 한국이 미일을 지켜주는 전초기지가 되어 중국의 공격 대상으로 전략

사드 한국 배치와 동북아 MD가 구축되면 한국은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전초 기지로 전략한다.

먼저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로 미국을 겨냥한 북중 ICBM을 조기에 탐지, 추적해 이 정보를 미국에 제공해 줌으로써 미국이 이들 ICBM을 한 번 이상 더 요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다 해상도가 뛰어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국 요격미사일의 요격 가능성을 높인다.

이에 시진핑 국가 주석은 지난 미중 정상회담(2016. 4. 1)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드 한국 배치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배치 사드가 “중국의 국가안전과 이익을 훼손하고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한다.”(연합 뉴스, 2016. 4. 1)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더욱이 한국군이 향후 SM-3 Block II A, II B 해상 요격미사일을 도입하게 되면 서해나 동해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중국과 북한의 ICBM을 요격할 수 있게 된다. 그 만큼 중국의 ICBM이 무력화될 가능성은 커진다.

한편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일본을 겨냥한 중국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 추적하여 일본에 제공해 줌으로써 일본이 이들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기회와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한국군이 향후 SM-3 Block II A, II B 요격미사일을 도입하게 되면 서해와 남해에서 일본과 오키나와를 겨냥한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 상에서 일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요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미국은 이른바 '원거리 발사(LOR)'와 '원거리 교전(EOR)'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원거리 발사'는 실현 단계에 접어들었다.

원거리 발사란 멀리 떨어져 있는 위성 또는 지·해상 레이더 등의 센서가 획득한 조기경보에 의거해 지상이나 해상에서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며, 원거리 교전은 지·해상 플랫폼(함정 등)에서 발사한 요격미사일을 다른 플랫폼(함정 등)이 유도하여 표적을 요격하는 것으로, 아직 실행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미일이 추구하는 이런 MD 작전은 일본을 겨냥해 날아가는 중국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에서 요격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남북으로 뻗어 있는 2,000m 높이의 산맥 때문에 동해 배치 일본 이지스 레이더나 일본 지상 배치 레이더가 미처 잡지 못한 북중 탄도미사일을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나 이지스 레이더로 조기에 포착해 동해상의 일본 함정 등에 전달함으로써 이 정보에 의거하여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태평양 연안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 이지스 함정이 일본 열도의 남북으로 뻗어 있는 높은 산맥 때문에 미처 잡지 못한, 괌과 하와이, 미 본토를 겨냥한 중국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나 이지스 레이더 등이 획득한 조기 탐지, 추적 정보를 이용해 발사, 요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듯 사드 한국 배치와 동북아 MD 구축은 한국을 북중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동북아 MD의 정보기지, 요격 기지로 전략시킨다. 그 대가로 한국은 사드 배치 지역이나 주한미군기지, 한국군 이지스함 등이 중국군의 공격 대상이 된다. 중국의 환구시보(2015. 5. 27)는 한국이 동북아 MD에 참여하게 되면 “미국의 총알받이로 전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반면에 사드 한국 배치와 한국의 동북아 MD 참여로 한국이 얻을 것은 없다. 앞서의 미 의회 보고서(2015. 4. 3)도 한국이 동북아 MD 참여로 받을 혜택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유사시 일본이 확보하게 될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는 한반도의 짧은 작전 중심 때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데 거의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3) 일본에 군사적으로 종속될 가능성이 매우 커져

사드 한국 배치와 동북아 MD 및 군사동맹 구축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일본에 종속시키게 된다. F-35의 부품 도입과 창정비를 앞으로 일본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이미 대일 군사적 종속의 길로 접어든 한일 군사관계는 사드 한국 배치와 동북아 MD 구축으로 대일 군사적 종속의 가속 페달을 밟게 된다.

한국이 동북아 MD에 참여하게 되면 미일 MD 체계의 하위 행위자가 되어 일본에 종속되는 것은 필연이다. 미일은 이미 10년 전부터 양국 간에 MD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연합 MD 작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MD 무기(SM-3 Block II A)를 공동 개발, 생산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미일 주도의 동북아 MD 참여는 MD 정보, 작전, 무기체계와 부품 도입 등에서의 대일 종속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되면, 한국군이 확보한 북한 핵미사일 정보 등을 일본에 직접 제공하게 됨으로써 정보 차원의 종속이 선행된다. 역으로 한국군이 향후 SM-3 Block II A 등의 MD 무기를 일본으로부터 도입하게 되면 일본은 한일정보보호협정 등을 앞세워 이 정보가 중국이나 북한 또는 3국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군사정보에 대한 일본의 통제도 허용하게 된다.

한국이 동북아 MD에 참여하게 되면 한국군은 한미일 연합 MD 작전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한미일 연합 MD 작전의 초점은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는데 두어지고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지키기 위한 작전은 부차적인 위치에 높게 됨으로써 한국군은 동북아 연합 MD 작전의 하위 행위자가 되어 자위대를 지원해 주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위대의 전술지휘를 받을 수도 있다.

한미 당국은 지난 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2014. 10)에서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 및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한반도 유사시 미국 MD 자산까지 동원하여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대북 작전에 양적·질적으로 우위에 있는 미국 MD 자산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대북 MD 작전을 미국 MD 체계의 정보, 요격 자산을 위주로 수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한국 MD 자산은 미국 MD 자산을 보완하는 하위 체계로 전략된다.

또한 미국 MD 자산을 동원하는 한미 양국 간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 수립은 한국군 MD 작전을 전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운용하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한국군 전작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유사 시 대북·중 탄도미사일 탐지, 요격 권한을 전적으로 미국이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가능성이 매우 낮은 조건에서 한국과 미국 MD 자산의 주력은 미 본토와 하와이, 오키나와 미군,

일본 방어, 그리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지원에 투입될 개연성이 훨씬 커진다.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에 합의했다는 것은 한국 MD 자산 지휘통제에 관한 그 간에 있었을 한미 간 갈등이 미국의 이해를 위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군이 향후 SM-3 Block II A를 도입하게 되면 관련 무기와 부품 조달을 일본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대일 종속은 필연이다.

동북아 MD 구축에 따른 한국의 대일 종속은 동북아 군사동맹 구축에 따라 동맹 전 분야로 확대됨으로써 정보, 작전, 병참 분야 전반으로 확대되게 된다.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 등을 체결하면 평시, 유사시 병참 분야에서 일본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군수 분야 전반으로 확대될 소지가 크다.

이렇듯 사드 한국 배치와 동북아 MD 및 군사동맹 구축은 한국이 미일 군사동맹의 하위 행위자로 자리매김 되어 정보, 작전, 군수 등의 분야에서 일본에 종속되고 일본의 전술지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4) 중국과 군사적 대결 상태에 빠지고 경제적으로도 보복 당할 가능성 커

사드 한국 배치와 동북아 MD 및 군사동맹 구축은 한중관계를 군사 대결적 관계로 몰아넣게 된다. 미중, 한중 유사시 사드 체계와 사드 배치 미군기지,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이 1차적으로 중국의 공격 대상으로 될 것이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마지노선을 파괴하는 것”(환구시보, 2015. 3. 9.)이라고 최후 통첩식 경고를 보내고 있다.

한편 사드 한국 배치로 중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단지 기우가 아님을 한, 중의 언론 보도를 통해 간접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뒤 한국 당국이 사드 한국 배치 입장을 밝힌 후에 증권사 연구원들은 중국이 “...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며, 실제로 화장품주 등 일부 중국 관련 소비주가 불안 심리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2016. 2. 21)

중국의 환구시보(2016. 1. 17)도 사드 배치로 한국은 “... 대가를 치를 준비

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 환구시보가 말하는 대가에 경제적 대가도 포함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5)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통일이 지연될 가능성 커

한국 배치 사드가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데 거의 효용성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이 사드 한국 배치의 명분을 북한 핵미사일에 두고 있고, 한편으로 사드 레이더가 종말 모드로 사용될 경우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해상도 높은 탐지, 추적 정보를 제공해 주며, 한국 배치 사드가 남한의 남부 지역을 공격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일부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배치 사드가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북한은 외무성 담화(2015. 3. 26)를 통해 한국 배치 사드를 ‘대북 선제공격용’(연합뉴스, 2016. 3. 4)이라며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앞서 지적했듯이 사드 한국 배치는 동북아 MD와 군사동맹 구축을 견인하게 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에 냉전체제를 방불케 하는 신냉전체제를 들어서게 한다. 냉전체제가 한반도를 분단시켰고, 분단을 장기화시켜 왔다는 점에서 신냉전체제의 도래는 한반도 분단을 연장시키게 될 것이며, 이로써 남북 통일에 연이어 넘어서기 어려운 또 하나의 커다란 장벽이 가로 놓이게 되는 것이다.

6) 한반도 평화가 파괴되고 군비경쟁으로 민중 생존권이 악화될 가능성 커

사드 한국 배치와 동북아 MD 및 군사동맹 구축은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강도 높은 군사적 대결을 야기함으로써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더 크게 파괴하게 된다.

군사동맹이란 ‘잠재적 전쟁공동체’로서 평시부터 전쟁을 준비한다. 따라서 한미일 3자 군사동맹체 결성은 한미일이 양자 군사동맹에 머물러 있을 때보다도 전쟁 준비에 보다 많은 인적, 물적 자산을 투입하고 훈련과 연합연습의 규모와 횟수, 강도 등을 모두 증대시키게 된다. 곧 지역 군비경쟁과 군사 대결

이 한층 격화되는 것이다.

군비경쟁 강화는 국방예산의 증액으로 이어진다. 현재 한국 국방예산의 규모는 GDP 대비 2.6%, 정부 예산 대비 12.4%이다. 통일 독일은 GDP 대비 1.2%, 정부 예산 대비 8.3%로, 남한은 독일의 GDP 대비의 2배가 넘고, 정부 예산 대비로는 1.5배에 달한다. 정부 예산 대비 OECD 국가 평균은 5.5%로, 한국은 이의 2배가 넘는다. 반면 세계 군사동맹을 이끌며 전쟁을 일삼는 미국은 국방예산이 GDP 대비 3.3%, 정부 예산 대비 16.3%로 한국보다 각각 0.6%, 3.9%가 높다.(SIPRI, '2015년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정부 지출 대비 국방비 비중은 2013년도 기준)

한국에서도 국방예산 규모가 GDP 대비 3%가 넘어야 한다는 주장이 군피아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지 이미 오래다. 한국이 지금처럼 남북 대결이 격화되고 한미일 군사동맹의 일원이 되어 중국 등과도 군사적 대결에 나서게 된다면 GDP 대비 국방예산이 3%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다.

아베 정권도 집권(2012년)한 이래 매년 0.7%~2.2%의 국방예산을 늘려 왔다. 이는 아베 정권 집권 이전의 10년 동안 일본이 국방예산을 매년 0.01%씩 줄여왔던 것과 극명히 대별된다. 군국주의적 대외 팽창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액인 것이다.

국방예산 증액은 복지예산의 증액을 막거나 도리어 삭감으로 이어져 복지를 정체시키고 후퇴시키게 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비단 남한에만 한정되지 않고 일본,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들 국가는 한결같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국방예산을 늘리면서도 복지예산도 늘릴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

이렇듯 사드 한국 배치와 동북아 MD 및 군사동맹 구축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불러와 국방예산을 증액시킴으로써 민중 복지를 후퇴시키게 된다.

4. 사드 한국 배치를 둘러싼 쟁점 돌아보기

1)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의지가 없다?

한 전문가는 한미 당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며, 카터 미 국방장관이 “아직 생산 중인 사드는 해외에 배치할 단계가 아니다”(2015. 4)라는 말로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터였다”(한겨레신문, 2016. 2. 27)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은 동북아와 세계 군사전략적 요구로 사드 한국 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개 정권 차원의 요구를 넘어 매우 강고하고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는 이미 미국이 선호하는 사드 배치 지역(평택, 군산)이 언론에 보도되고 배치 시기(올 상반기나 연말)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한 ‘공동실무단’이 가동에 들어가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

총선 이후만 하더라도 미국의 고위 관료들은 잇달아 사드 한국 조기 배치를 확신하는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 “사드 한국 배치는 이뤄질 것”(카터 미 국방장관, 2016. 4. 12)
- “한미, 사드 조기 배치 타당성 검토”(로즈 미 국무부 차관보, 2016. 4. 13)
-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백악관 대변인, 2016. 4. 29)
-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이 공식 협의 중”(브링큰 국무부 부장관, 2016. 4. 29)
- “한미가 사드 배치 협의를 정식으로 시작한 것에 대해 기쁘다.”(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2016. 5. 17)

이상의 미 고위 관료들의 최근 발언을 통해서도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의지는 계속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작년 4월의 앞서 카터 국방장관의 사드 관련 발언은 미국 내 사드 생

산과 실전 배치 준비가 예정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 현상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한국 내 경계를 누그러뜨리려는 연막에 불과하다. 당시 한국 정부의 사드 관련 공식 입장은 “요청받은 바도, 협의한 바도, 결정된 바도 없다”는 이른바 3무(無) 입장이었다.

또한 당시 카터 국방장관의 사드 관련 발언이 사드 한국 배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의 발언 후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의 케리 국무장관의 발언으로 바로 확인되었다. 당시 방한 중인 케리 국무장관은 "사드 배치 협의 중, 북한 위협 때문"(2015. 5. 19)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그 역시 한국 정부의 항의(?)로 “미국 내부 청중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바로 물타기를 했다.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수법’이다.

이렇듯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의지가 없다는 주장은 아무도 근거도 없이 특정 시점의 특정 발언을 절대화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능력이 없다?

일부 군사전문가는 미국의 MD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한국에 배치할 사드 포대 여유분이 없으며, 따라서 사드 한국 배치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할 의지가 없다는 근거의 하나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 역시 극단적인 사실 왜곡이다.

미국의 MD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미 미사일 방어국의 2016년 회계연도 예산은 83억 달러로, 2015년 회계연도 78억 달러에서 5억 달러가 늘어났다(MDA, 'Historical Funding for MDA FY85-16'). 이 중 사드 예산은 4억 6천만 달러에 달한다. MD는 부시 행정부에 의해 2001년 미국의 핵전략 3원의 한 축으로 위상이 높아졌다. 따라서 미국이 핵전략을 전면 수정해 MD를 폐기하지 않는 한 MD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30년 간 미 MD 예산이 전액 삭감된 예는 한 차례도 없다.

한편 미국은 현재 사드를 5개 포대 보유하고 있고, 이 중 3번째, 4번째 포대는 훈련이 끝나 실전 배치할 수 있으며, 5번째 포대도 훈련을 하고 있다.

2017년까지 모두 7개 포대를 도입해 이 중 6번째 포대의 훈련을 2016년까지 끝내고 7번째 포대의 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국 미사일 방어국장은 이들 포대 중 1개 포대가 아랍에미레이트에 배치할 두 번째 포대라고 밝혔다.(미국 미사일 방어국장의 의회 청문회 증언, 2016. 4. 13). 또한 실전 배치 준비가 끝난 사드 포대들은 한국, 일본 등에도 배치될 수 있다. 일본도 작년 10월, 나카타니 방위성 장관이 공식으로 사드 도입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렇듯 미국이 한국에 배치할 사드 포대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다.

또한 미국이 현재 보유한 사드 요격미사일이 100기 밖에 되지 않아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도 잘못된 주장이다. 100기의 요격미사일이면 얼마든지 한국에 사드 포대를 배치할 수 있다. 사드의 생산이 지연되는 가운데서도 미국은 최근 아랍에미레이트에 24기의 요격미사일을 인도했다.(미국 미사일 방어국장의 의회 증언, 2016. 4. 13). 사드 미사일 포대가 모두 72기의 요격 미사일을 갖출 수 있지만 평시 이 요격미사일을 다 갖출 필요는 없다. MD란 본디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규모 탄도미사일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어서 체원대로 요격미사일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다.

한편 미국은 2017년 말까지 61기의 사드 요격미사일을 육군에 추가 인도할 계획이며, 모두 205기의 사드 요격미사일을 보유할 계획이다.(미국 미사일 방어국 장관 의회 청문회 증언, 2016. 4. 13).

이렇듯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미 MD 예산과 사드 생산과 배치 계획에 대한 정보를 왜곡한 주장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3) 미국 배치 사드로 미국을 겨냥한 ICBM을 요격한다?

일부 군사전문가는 사드로 미 본토를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미 텍사스 육군 부대에 배치되어 있는 4개의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미 MD와 사드 체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드는 고도 40~150km에서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체계다. 장거리 탄도미사일(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요격하기 위한 체계가 아니다. ICBM을 요격할 수 있는 미국 MD 체계는 GBI(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 2017년까지 44기 배치 예정)와 이지스 BMD의 SM-3 Block II A(2017년 배치 예정), II B(개발 중)뿐이다. 마하 8~9인 사드의 속도로는 마하 22의 속도로 날아와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ICBM을 요격할 수 없다. 한편 '한국 배치 사드'로는 미국을 겨냥한 북한이나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없다. 고도, 사거리, 속도가 모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텍사스에 배치된 사드가 미 본토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미 MD와 사드 체계에 대한 기본 상식도 갖추지 못한 주장이다. 이런 MD와 사드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미국이 미 본토 방어를 포기하고 사드를 한국에 내줄리 없다는 다소 코미디 같은 주장을 용감(?)하게 한 것이다.

4) 대구 지역 배치 사드로 일본을 겨냥한 노동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사드 관련 토론회에서 대구에 배치된 사드로 일본을 공격하는 북한 노동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도 근거 없다.

일본을 겨냥해 날아가는 북한의 노동미사일은 정점 고도가 300km에 달한다. 따라서 사거리 200km에 요격 고도가 150km 미만인 사드 체계로는 이를 요격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구에 배치된 사드로 일본을 겨냥한 노동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저궤도로 발사해 정점 고도를 낮춰야 하고 대구 지역 200km(사드 사거리) 내로 노동미사일이 지나가도록 발사해야 한다. 한 마디로 북한이 일부러 대구 지역 사드가 노동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발사하지 않은 한, 이를 요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사드가 한국 어느 지역에 배치되더라도 북한은 이를 피해 일본을 겨냥한 노동미사일은 발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구 지역 배치 사드가 일본을 겨냥해 날아가는 노동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낭설이다.

5)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로 중국 내륙 깊숙이 위치한 중국의 ICBM 기지를 탐지할 수 없다?

한 군사전문가는 온라인 기고 글에서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가 중국 내륙 깊숙이 위치한 중국의 ICBM 기지를 탐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그의 주장은 사드 레이더의 효용성을 낮춤으로써 사드가 대 중국용이라는 주장의 힘을 빼고 나아가 사드 한국 배치가 미중 간 전략안정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한미 당국의 주장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4,000km가 넘는다. 중국 내륙의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된 ICBM을 탐지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ICBM 기지는 대부분 중국 동부와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미국이 발표한 대로 2,000km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중국 동·북부에 위치한 중국의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된 ICBM을 모두 탐지할 수 있는 것이다. 사드 레이더를 대 중국용으로, 나아가 미중 간 전략안정을 무너뜨릴 전략무기로 분류하는데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도 사드 X-밴드 레이더(AN/TPY-2)를 전략자산으로 분류하고 전략사령관이 지휘한다.

6) 북한 노동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

사드 한국 배치론자들은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가?

노동미사일은 사거리가 1,000km 이상으로 일본이나 오키나와의 주일 미군기지를 공격하기 위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따라서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 발사각을 높이거나 낮춰 발사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드 한국 배치론자들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 사거리를 줄여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반도 유사시 증원전력으로 한반도에 투사될 주일미군을 타격하기 위한 노동미사일을 남한을 겨냥해 발사한다는 것은 북한의 작전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데는 사거리가 짧고 정점 고도도 낮으며, 남한까지 도달 시간도 짧은, 따라서 한미동맹군의 요격을 피할 가능성이 높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효용성이 더 크다. 이에 북한이 수백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놔두고 굳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편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면 상승 속도가 늦고 비행시간도 길어져 탐지가 용이하고 요격당하기 쉽다. 자세제어도 어렵고 정확성도 떨어진다.

이에 유승민 의원 주최 국회 사드 관련 토론회(2014. 1. 15)에서 이동원 공군 대령은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는 것보다는 발사각을 낮춰 저궤도로 발사하는 것이 탐지가 어렵고 비행시간도 짧아 남한에 더 위협적이기 때문에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다른 한편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저궤도로 사거리를 줄여 발사하는 경우 사거리와 정점 고도, 남한 도달 시간이 스커드 B, C와 유사해져 노동미사일을 굳이 저궤도로 발사해야 할 필요성이 상실된다. 또한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저궤도로 발사할 경우 사드로 수도권을 방어하는 데서 요격에 필요한 시간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탐지 시간이나 사격통제 시간이 단 몇 초씩이라도 지체 되면 요격 시점을 놓치게 된다.

이렇듯 작전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노동미사일의 발사각을 높이거나 낮춰 남한을 공격하더라도 효용성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미치지 못해 굳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경우에도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이 보유한 PAC-3로 요격할 수 있어 사드 도입의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7)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면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다층방어가 가능하다?

한미 당국이 사드 한국 배치 명분으로 가장 앞에 내세우는 것은 사드를 도입하면 PAC-3와 함께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다층방어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역시 허구다.

먼저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도가 낮고 남한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 이를 사드로 요격하고 실패했을 경우 다시 PAC-3로 요격할 시간과 기회를 갖기 어렵다. 북한이 남한을 겨냥해 발사할 탄도미사일은 KN-02, 스킨드 B, C 등 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들 탄도미사일로 수도권을 공격한다면 사드로 이를 요격할 수 있는 고도나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수도권 이남을 공격하더라도 사드로 스킨드-C조차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제한된다.

노동미사일을 저궤도로 발사하여 수도권 공격한다면, 이때 노동미사일은 스킨드 C와 비슷한 궤도를 그리기 때문에 사드로 이를 요격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저궤도의 노동미사일로 수도권 이남을 공격했을 때도 스킨드-C 요격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는 매우 제한된다. 앞서 설명한 대로 탐지 시간이나 사격 통제 시간이 단 몇 초씩이라도 지체되면 요격 시점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사드는 본디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적합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이다.

사드의 요격 대상이 되는 것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 정점 고도가 300km 이상 올라가고 남한까지 날아오는 비행시간이 길어질 경우뿐이다. 그러나 이때도 사드로 요격한 후 실패했을 경우 다시 PAC-3로 요격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질 지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노동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과 표적 획득, 사격통제 과정 등이 한 치의 지체와 오차 없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경우로, 현실에서는 거의 실현되기 어려운 가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본디 다층방어란 ‘Shoot-Look-Shoot’의 요격 방식으로, 미국을 겨냥해 날아가는데 30여 분 안팎의 비행시간이 소요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ICBM이나 일본을 겨냥해 날아가는데 최소한 10여분의 비행시간이 소요되는 중국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에나 적용할 수 있는 요격 방식이다. 한반도처럼 작전 중심이 짧아 불과 3~5분 사이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개념이다.

또한 설령 사드와 PAC-3로 2차례의 요격(다층방어)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이 노동미사일 1~2기를 발사했을 경우거나 가능한 주장이다. 50여 기의 노동미사일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만약 노동미사일을 동시에 여러 기를 발사했을 경우에는 다층방어가 아예 불가능하다. 동시에 발사되는 다량의 노동미사일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수의 사드 포대가 배치되어야 하나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사드와 PAC-3로 다층방어가 가능하다고 해도, 이는 사드로 노동미사일의 요격이 가능한 사드가 배치된 특정 지역에 한정된 개념이며, 그 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다층방어가 가능하지 않다.

또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다층방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PAC-3가 방어해야 하는 지역에 모두 배치되어야 하는데,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거나 한국군이 확보 중에 있는 PAC-3 발사대는 각각 48기(1개 여단 2개 대대)로 오산, 평택, 군산, 대구 등의 주요 군시설에 매우 제한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에 민간인이나 주요 민간시설은 물론 국가 기간시설이나 원자력 발전소 등을 방어할 수 없고 심지어는 다른 주요 군시설조차 방어할 수 없다. 사거리 20km, 요격 고도 15~20km로 방어 지역이 매우 협소한 점방어 무기체계인 PAC-3가 갖는 성능의 한계 때문이다. 따라서 사드가 요격에 실패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PAC-3로 요격하는 다층방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지역에 PAC-3를 배치해야 하는데, 이는 수백기가 넘는 PAC-3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북한이 SLBM을 실전 배치하여 짧은 사거리와 저궤도로 남한을 공격해 오면 다층방어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된다.

이렇듯 중심이 매우 짧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다층방어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주장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국방예산을 모두 다층방어에만 투입하더라도 가능하지 않다.

8) 북한의 미친(?) 노동미사일 시험 발사가 사드 배치의 빌미를 주었다?

한 군사전문가는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여 사거리를 줄이는 시험 발사(2014. 3. 26)를 함으로써 미군이 이를 북한의 새로운 대남 공격용 탄도미사일 전술로 받아들여 사드 한국 배치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 북한이

미국에 사드 한국 배치의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주장은 당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2014. 6. 19)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잘못된 주장이다. 노동미사일을 정상 발사각(40도)으로 쏘면 정점 고도가 300km 내외에 이른다. 따라서 김민석 전 대변인의 발표대로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시험 발사했다면 정점 고도가 300k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노동미사일 고도는 '160km 이상', '사거리는 650km'에 불과하였다. 이는 북한이 당시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한 것이 아니라 발사각을 낮춰 발사했거나 정상 발사각으로 발사했으되 연료를 Cut Off시켜 사거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발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했다는 김민석 전 대변인의 주장은 객관사실에 대한 왜곡이다.

또한 당시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여 남한을 공격했을 때 대기권 진입 속도가 빨라져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보유한 PAC-3로 요격이 어렵다는 주장도 함께 했다.

그러나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 대기권 진입 속도가 다소 빨라지더라도 PAC-3로 요격할 수 있다. 이는 미 국방부 MD 자료나 한국 내 사드 도입을 주창하는 전문가들의 관련 시뮬레이션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미국 미사일 방어국(MDA)은 사거리 1,3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을 PAC-3가 종말 하층에서 요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노동미사일은 발사 후 연료통이 분리되지 않아 대기권 진입시 공기 저항이 스킵드 C보다 크며, PAC-3 요격 고도에서는 낙하 속도(마하 약 6.3 전후)로 스킵드-C와 같거나 오히려 떨어진다. 따라서 고각으로 발사된 노동미사일을 PAC-3로 요격할 수 없다는 김민석의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으로, 북한의 노동미사일 시험 발사를 사드 도입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노골적인 사실 왜곡이다.

사실 북한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노동미사일을 최대 사거리로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없다. 1993년 노동미사일을 최초로 시험 발사한 이래로 수차례에 걸쳐 동해를 향해 400~650km의 사거리로 시험 발사를 해 왔다는 것은 MD 전문가라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규수, 『ICBM, 그리고 한반도』, 2012. 5 ; 장영근, 「사드 미사일 체계의 한반도 시뮬레이션」, 2016. 3)

그런데도 이 군사전문가는 이러한 국방부의 왜곡된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북한의 노동미사일 시험 발사를 ‘미친(?)’ 발사, ‘이상한 전술’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이 미국에 ‘사드 한국 배치’의 빌미를 준 것인 양 주장했다.

2014년 3월의 북한의 노동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친’ 시험 발사 아니라 ‘통상적’인 시험 발사였으며, 따라서 남한에 위협을 줄 새로운 탄도미사일 전술, 곧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추진할 빌미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9) 박휘락의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입장 변화와 왜곡된 주장

박휘락은 그 동안 작전 중심이 짧은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 상 사드의 효용성은 크게 떨어지며, 따라서 하층방어 위주로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오직 주변국(중국, 러시아)의 잠재적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만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을 뿐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2013. 2. 12) 후 핵탄두의 소형화, 다중화, 경량화를 이루었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박휘락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상층 방어체계를 구축, 한국이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 한국 국방부가 줄곧 밝혀 온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충실히 따른 것이다. 상층 방어체계를 구축(사드 한국 배치)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 MD로 직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상층 방어체계 구축(사드 한국 배치) 반대에 대한 그의 소신(?)은 2014년 이후 미국이 공개적으로 사드 한국 배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한국 국방부도 사드 한국 배치 허용 입장을 비치자 기존의 입장을 바꿔 사드 한국 배치의 유용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PAC-3 요격률이 낮기 때문에 상층체계로 이를 보완해야 하며 특히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할 경우 마하 7의 속도로 급강하하기 때문에 PAC-3로는 요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박휘락, 「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서의 루머와 확증 편향」, 『전략연구』 통권 제68호, 2016. 3)

그러나 PAC-3의 요격률이 낮아 사드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은 애초부터 남한 방어용으로 사드가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그의 이전 주장과 모순된다. 한편 PAC-3가 고각으로 발사된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은 앞서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사드 한국 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의 하나로 사드 레이더가 대북용으로 중국의 ICBM을 탐지, 추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박휘락, 앞의 글 23쪽). 그러나 이는 “한국이 탄도탄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는데서…중국으로부터 발사되는 미사일을 감시하데 있어서 한국은 매우 효과적인 위치라는 점에서 이 분야에 관해서는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보완성이 클 수 있고 큰 비용 소요 없이 미국과의 협력을 도출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박휘락, 「한국의 미사일 방어 : 방향과 과제」, 『군사논단』, 2009년 여름호, 49쪽)는 이전의 자신의 주장을 뒤엎은 것이다.

이렇듯 박휘락은 객관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이전 주장까지 스스로 부정하며 사드 한국 배치 주장을 펴고 있다. 무엇을 위한 입장 번복인가?

10) 사드 레이더에서 100m만 벗어나면 전자파 피해로부터 안전하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009년 광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의 안전거리는 사람은 100m, 전자장비는 500m, 항공기는 5.5km라며 “100m 밖에서는 인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2016. 2. 11)이라고 주장했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국회 국방위에서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 이내만 조심해야 할 구간이고 그 밖은 안전구간”(2016. 2. 16)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국방부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을까?

국방부 주장은 미 육군 교범(2012년)이 출입을 통제하는 위험 반경의 기준으로 5.5km를 제시한 것과 큰 차이가 난다. 미 육군 교범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에서 탐지각도인 130도를 기준으로 100m까지는 모든 인원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절대 위험구역’이며, 반경 2.4km까지는 레이더로 인해 전자기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와 각종 장비의 작동과 배치가 금지된다. 이어 3.6km까지는 허가 받지 않은 인원의 출입이 차단되고, 5.5km까지는 항공기, 전자장비 등 폭발 위험이 있는 모든 장비와 전투기를 조종·정비하는 인원의 출입이

통제된다.(‘AN/TPY-2 FORWARD BASED MODE(FBM) RADAR OPERATIONS’, 2012. 4. 16)

2015년 광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100m 안에서는 “전자파가 심각한 화상이나 내상을 초래할 수 있다(It can cause a serious burn or internal injury).”고 명시하고 있다(SBS, 2016. 2. 16).

사드 레이더(AN/TPY-2)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은 고주파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고주파 전자파는 인체에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2011. 5. 31)되며, 인체에 대한 피해 역시 방사선처럼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도 있다.

사드 레이더가 배치된 일본 교카미사키의 주민들도 전자파와 발전기 소음에 의한 구토와 어지럼증을 겪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렇듯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피해 정도에 대한 국방부의 주장은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주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주민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국가안보를 운운할 수 있는가?

글을 마치며

사드 한국 배치는 우리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국가와 민족과 민중의 운명을 놓고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갈등과 전쟁의 길을 갈 것인지 선린과 평화의 길을 갈 것인지, 위계와 종속의 길을 갈 것인지 호혜 평등과 자주를 갈 것인지, 대결과 분단의 길을 갈 것인지 화해와 통일의 길을 갈 것인지, 생명과 복지의 길을 갈 것인지 죽음과 민생 파탄의 길을 갈 것인지 묻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는 것은 우문에 불과하다. 평화, 자주, 통일, 생명의 길을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백해무익한 사드 한국 배치와 동북아 MD 및 군사동맹의 길을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